

‘여순사건’ 그릇된 홍보물 질타 쏟아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경찰청 국정감사

“반란·소요냐?” 지적에 전북청장 “수정할 것”

피의자 사망으로 불거진 강압수사 논란 지적도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국감)에서 ‘여수·순천 사건(여순사건)’에 대한 그릇된 홍보물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북경찰청 1층 홍보관 홍보물을 보니 여순사건에 대해 표기해놓았는데, 항의를 받아 ‘반란’을 ‘사건’으로 바꿔 표기했다”며 “그런데 그 위 문구는 여전히 좌익세력 반란에 대한 진압이라고 적혔다. 여순사건이 반란과 소요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여순사건을 좌익세력의 소요와 반란이라고 규정되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 “여순사건은 국가폭력이다. 빨리 시정하고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말했다.

정중생(조국혁신당) 의원은 “여순사건에 대한 경찰 인식은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다. 이같은 인식 자체가 역사왜곡”이라며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반란’ 표기를 ‘사건’으로만 바꾸고 내용 하나 손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 외에도 홍보물에는 타 지역의 반란·소요에 대한 원정 진압 성과를 거뒀다고 적혀 있다”며 “민

간인 학살을 홍보할 일이나. 반성할 일이다. 역사왜곡 자료를 어떻게 버젓이 홍보관에 올릴 수가 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순사건은 학살에 희생된 생존자분들과 유족분들이 그 피해 회복이 안 돼 진상규명이 진행 중인 사건인데, (경찰이)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며 “홍보물이 걸린 자리에 경찰의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바뀌라”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여러 의원의 지적 속에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제대로 내용을 검토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조선국 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장병들의 반란과 이에 대한 진압 과정에서 전남 여수·순천 일대의 거주 중이던 무고한 민간인들이 학살로 희생된 사건이다.

전북경찰청은 1층 홍보관 홍보물에서 ‘정부수립 초기의 전북경찰’ 부분에서 ‘여순반란 공비를 수색하는 경찰’이라는 표기 등 여순사건을 좌익세력의 반란과 소요에 대한 진압 성과로 표기했다.

논란이 되자 경찰은 ‘여순반란’의



김철문(사진 왼쪽) 전북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8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증언선서를 하고 있다.

표기를 ‘사건’으로 교체하고, 일부 문장을 수정한 바 있다. 이날 국감 당시 해당 홍보물은 ‘개선종’이라는 글씨가 적힌 판단 천으로 이를 감춰놓았다.

또한, 피의자 사망으로 불거진 강압 수사 논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박수민(국민의힘) 의원은 “익산에서 간판장비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공직자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진행된 수사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였던 업체 대표는 수사를 받고 목숨을 끊었다”며 “이제 곧 모든 수사에서 경찰이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과정이 추진 중이다. 앞으로 경찰에서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경중(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우리 형사사법절차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의자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니겠느냐”며 “(피의자 사망 등) 문제는 개별 수사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사 문화와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모 의원은 “단순히 이에 대한 교육을 할 게 아니고 수사 역량을 고도화시키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그게 청장님의 역할이다. 책상에 앉아서 ‘인권이 중요하다’ 백날 해봤자 (일선 수사관들이)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의원들의 잇

따른 지적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의원님들이 해주신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

전북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잇따라 숨지며 강압수사 논란이 거세졌다.

지난 8월 7일 익산 간판장비 사업 특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가 숨졌는데, 이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강압적 질문을 받은 뒤 부당감을 지인에게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전 재개발조합 비리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등 일주일 동안 수사를 받던 3명의 피의자가 숨졌다. /뉴스

전북 대도약 균형성장 견인

윤준병 의원,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8일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법 법안은 윤 의원의 제22대 국회 200번째 법안으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성장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도약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윤 의원은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어 농업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농생명수도인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에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50여 개의 농생명 관련 국가기관이 밀집해 있어, 농업 생산·연구·행정·유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농협중앙회가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수천억 원 규모의 지역 투자와 수백억 원대의 지방세 증가,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금융지주를 산하에 둔 농협중앙회의 특성상, 관련 금융기관과 인력의 전북 유치로 ‘농생명·금융허브’로의 도약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 정음=김대환 기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신뢰성 확보 시급”

정중복 도의원, 정책간담회서 “총인건비 기준 마련 등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중복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3)은 최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총인건비 기준 마련과 조직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표로 이끄는 지방재정분권연구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군산대 이국용·황성원 교수, 원광대 박민정 교수, 김솔지·강태창·이수진 의원, 방상운 예산과장 등이 참석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북도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행정안전부의 제안모델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상위 등급이 남발되고, 인건비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성과급과 과다 지급과 평가의 공정성 문제로 도민 신뢰를 잃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 의원은 “과도한 자율성과 관리 소홀로 평가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다”며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한 총인건비 기준 마련, 기관의 역할 재정립,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도민의 열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평가지표의 주기적 점검과 기관평가·기관장평가의 분리, 정보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정 의원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평가체계 전면 혁신안을 마련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율”

국주영은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창업농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이 자금 유통에 따라 상환 조건이 달라 청년 간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국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 중 후계농육성자금은 상환기간이 2020년부터 최대 20년으로 연장된 반면, 귀농창업자금은 여전히 5년 거치 10년 상환에 머물러 있다. 또한 ‘2018~2019년에 선발된 초기 후계농육성자금 대상자는 상환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돼, 같은 청년농업인임에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들 중 상당수는 농업 초기의 불안정한 수익 구조와 기후재해, 농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매년 수천만원의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 의원은 △귀농창업자금의 상환기간을 후계농육성자금과 동일하게 20년으로 연장할 것, △2018~2019년 선발된 초기 후계농 대상자에게도 상환기간 연장 혜택을 소급 적용할 것, △청년농업인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컨설팅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우리 농업의 미래는 청년에게 달려 있으나 지금의 청년 창업농 제도는 청년을 지원하기보다 빚으로 내모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같은 청년농업인임에도 자금 유통에 따라 상환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귀농창업자금의 상환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초기 선발자에게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에 신협·수협서 134억원 대출

대출과정에 수많은 규정위반사례 있어… 민주 이원택 의원 “신상파악 후 책임 물어야”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에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규정 위반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금융감독원과 신협,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성수협과 진해수협이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건물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수많은 규정 위반사례가 있었던 점을 밝혀내고, 국감장에서 노동진 수협 중앙회장 및 여러 관계자들에게 재차 세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단위수협 대출 심사과정을 보면 먼저 영업점에서 영업점장 검토의견서나 대출 승인 신청서(품의서)를 작성하면 심사부에서 심사의견서를 통해 심사한 후 대출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여신거래약정서를 써야만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고성수협과 진해수협에서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에 대출했던 과정을 돌아보면 이런 과



정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체로 대출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나타났다. 특히, 감정평가 견적서에는 355억원으로, 감정평가

서에는 338억원으로 감정평가액이 혼동된 체로 사용되어서 정식 계약 사무를 하는 조직인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고성수협은 감정평가서 공문시행일이 6월 17일이었는데, 공문이 도착하고도 전인 6월 13일에 영업점장 검토의견서와 대출 승인 신청서가 작성되었고, 감정평가서에 적혀 있는 감정평가일이 6월 12일임에도 불구하고 6월 7일로 허위기재된 상태였다.

또한, 심사의견서에는 중요한 의견일이 적혀있지 않았고, 역시 감정평가일은 6월 7일로 허위기재하고 있었다. 더욱이 대출심사위원회 개최일인 6월 18일보다 하루 먼저인 6월 17일에 여신거래약정서가 체결

된 것으로 나타나서 미리 짜고 작성해놓았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진 수협 중앙회장이 8년동안 조합장으로 일했던 진해수협도 대출금 승인 품의서는 6월 13일이 작성일이었는데 심사의견서는 그보다 먼저인 6월 10일이 작성일이었고 또다시 대출심사위원회 회의일은 6월 13일로 작성되었다. 또한, 공동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양 수협이 적어놓은 교회 현금액이 차이가 났고, 주간조합의 권역의 대출조합을 피하고자 서울·경기·인천을 동일 권역으로 취급하는 수지신협을 주간조합으로 정하는 품수를 부리기도 했다.

이원택 의원은 “어민과 서민들에게는 한없이 높은 컷대를 보이던 신협과 수협이 왜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와 도이치모터스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지 알 수가 없다”며 “변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밝혀 잘못된 있는 사람들에겐 지위고하를 가리지 말고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불법개조된 것도 합격… 농기계 검정제도 신뢰성 ‘의문문’

검정·사후관리 모두 허점… 피해는 농민에게 전가

로보드림(주)의 RT-135 모델 트랙터가 농촌진흥청의 종합검정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매 단계에서는 불법 개조된 형태로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농기계 검정제도의 근본적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보드림(주)은 RT-135 모델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합검정을 통해 ‘트랙터’로 적합한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검정 당시에는 굴삭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순수 트랙터 형태로 심사를 통과한 반면, 실제 시중에 판매된 제품은 굴삭장치를 ‘오픈 옵션’ 명목으로 옵션 부착하여 출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차체 구조와 밸런스, 안전장치까지 임의

로 변경되어, 실질적으로는 트랙터가 아닌 굴삭기로 판매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구조 변경이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명백한 불법개조 행위라는 점이다. 해당 법령은 트랙터의 구조강제 변경 및 용접식 장치 부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제조사는 이를 무시한 채 부속작업기 등록을 하기로 신청하여 판매를 지속했다. 표준적인 부속작업기는 후미 링크에 탈부착이 가능해야 하지만, RT-135 모델은 ‘일체형 고정’ 방식으로 개조·출고되어 사실상 굴삭기 형태로 유통됐다.

검정기관에서 구조·조작 및 안전성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이후 실제 판매 제품의 구조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불법 개조된 기계

가 약 6년 동안 전국에 유통되었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다.

더욱이 RT-135 모델은 불법 개조된 상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급 대상에까지 포함되었고, 일부는 농진청이 ‘신기술 농업기계’로 선정해 전신과 홍보까지 지원했다. 국가가 불법기계를 ‘합격품’으로 인정하고 세금으로 구매를 지원한 셈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됐다. 농진청의 검정을 신뢰해 제품을 구매한 농민들은 잦은 과열, 화재, 엔진통발 등 구조적 결함으로 반복적인 고장을 겪었다. 그러나 민사 소송에서는 “검정 적합 판정을 받은 국가 인증 제품”이라는 이유 등으로 사용자 과실로 판단돼, 한 피해 농민은 약 2억 4천만원의 기계 손실을 변상해야 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